

체제변혁기 동유럽의 정치균열과 인정의 정치: 헝가리 사례*

박정원 | 한국고원대학교

| 국문요약 |

이 연구는 체제변혁기 동유럽의 정치균열의 변동 양상과 갈등구조의 변화를 헝가리를 사례로 삼아 고찰하였다. 두 가지 이론적 자원으로는 정치균열이론과 인정투쟁이론을 활용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일당독재의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정치균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도 시민사회가 분쇄되거나 철저하게 억압된 상태에서 정치균열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물론 밀로반 질라스가 말하는 신계급, 다원사회에서 논의되는 이익집단과 유사한 현상의 존재, 당내 노선투쟁과 같은 유사정치균열의 요소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현상을 정치균열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정치균열이 발견되지 않으며 인정의 정치가 아니라 적대의 정치 일변도였던 것이다.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정치균열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시민사회가 재생되며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정치균열의 작동과 함께 정치무대에서 운동정당, 역사정당, 후진정당들 간의 경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체제변혁기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갈등구조의 변화는 당-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억압과 분쇄로부터 시민사회의 재생 및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재생과 함께 헝가리에서도 이념, 시장경제 도입, 민족문제, 노동자와 사용자 등의 정치균열이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헝가리의 정치균열은 상대적으로 덜 과격하고 덜 극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는 상이한 헝가리의 양시앙 레짐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헝가리도 일당독재와 계획경제라는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의 일원이었지만, 1956년의 좌절된 혁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화된 양시앙 레짐의 성격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결국 헝가리의 경우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적대정치도 덜 극단적이었으며, 체제변혁 과정에서 가능해진 인정의 정치도 비교적 큰 갈등 없이 공정한 경쟁의 모습을 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동유럽, 헝가리, 체제변혁, 정치균열, 인정투쟁, 소련형 사회주의, 시민사회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6153).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공산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체제로 이행되는 이른바 체제변혁(system transformation)기¹⁾에 정치균열이 어떻게 작동하고 변모하였으며 갈등구조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동유럽의 헝가리를 사례로 삼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단과 조직의 이익 대립과 사고방식의 충돌은 정치균열을 만들어 내며, 이것이 정치세력 간 대립과 갈등, 협력과 연대를 가능케 하는 정당정치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정치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져 온 바 있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발견되는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과연 정치균열은 어떤 모습을 보였으며, 체제변혁기에 갈등구조는 어떻게 형성되고 재편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성과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동유럽 공산체제에서의 정치균열 양상, 체제전환과 관련한 정치세력 간 새로운 갈등과 협력, 그리고 그것의 귀결 과정을 헝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 가운데 헝가리는 흥미로운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공산체제에서 경제개혁을 단행하여 1960년대말부터 상당한 정도의 자본주의 메카니즘을 도입했던 점, 공산체제 붕괴가 평화로운 협상혁명의 모습을 보인 점, 체제전환 과정이 비교적 점진적이고 순탄하게 진행된 점, 체제 이행 과정에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앞서 EU 가입이나 NATO 가입이 가능했던 점 등을 통해 체제변혁기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모범사례로 간주되어 왔다. 공산정권

1) 동유럽의 체제변혁은 일반적으로 구공산체제로부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로,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민주이행이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과거 권위주의정부로부터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지칭한다고 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도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듯이, 동유럽의 경우 체제변혁이 오늘날도 진행 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더 이상 민주이행을 논하기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논하거나 1987년체제의 종식을 논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으로 보면 민주이행의 단계를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동유럽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체제변혁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체제변혁을 사회주의체제가 약화되고 궁극적으로 붕괴되는 1980년대 말과 이후 다단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히는 1990년대를 체제변혁기로 규정하기로 한다.

붕괴 과정에서 차우세스쿠정권이 유혈혁명을 통해 붕괴한 루마니아 사례나 체제 변혁 과정에서 참혹한 전쟁과 인종청소를 경험한 유고슬라비아 사례가 적대의 정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 폴란드나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국가들은 체제변혁 과정에서 인정의 정치를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공산체제 붕괴와 같은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헝가리가 이처럼 비교적 순조롭고 평화로운 이행 과정을 경험하게 된 데에는 정치세력 사이에 적대적 정치보다 협력과 인정의 정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었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치균열이 반드시 적대의 정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치세력 간 상호인정과 협력 및 타협을 통해 인정의 정치의 실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인정투쟁론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적대의 정치에 익숙해진 한국정치의 모습에서 협치의 가능성과 인정의 정치를 모색하고자 하는 필요성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체제변혁기 동유럽 사례에 대한 고찰은 그 자체로서 연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적대의 정치를 넘어서 인정과 협치의 정치를 모색하는 한국사회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하 2장에서는 정치균열과 인정의 정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3장에서는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정치균열 문제를 다루며, 4장에서는 체제변혁과 관련한 갈등구조의 변화를 논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자원: 정치균열과 인정의 정치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2가지를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립셋과 록칸의 정치균열(political cleavage) 이론이다(Lipset and Rokkan 1967; Lipset 1970). 정치균열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견해로서 집단화 내지 조직화된 것을 가리킨다. 정치에 대한 사회적 기초를 논한 립셋과 록칸에 따르면 서유럽 정치균열 구조의 형성에는 두 가지 기원이 있는 바, 그것은 국민혁명과 산업 혁명으로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각국에서 중심부 대 주변부, 국가 대 교회, 농촌 대 도시, 자본가 대 노동자 등의 균열이 상이한 정당체계를 발전시켰다고

한다. 균열 가운데 정당 간 대립을 만들어 내는 균열과 그렇지 못한 균열이 있지만 핵심은 정치균열이 그것을 반영한 정당정치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립셋과 록칸의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서유럽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서 타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이론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서유럽의 국민혁명과 산업혁명이 가져온 네 가지 사회적 균열구조가 한국의 경우 그대로 재현되지 않고 국민국가 건설 단계에서는 민족정체성 대 체제정체성의 균열이 발생했고, 근대화 단계에서는 지역주의 균열 및 서구와 같은 형태나 규모는 아니지만 자본가 대 노동자의 균열이 형성되었던 것이다(강원택 2011, 1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론들은 정당정치의 동태적 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동유럽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 유용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치균열을 논하면서도 샤프츠슈나이더는 립셋 및 록칸과는 입장을 달리하여 설명하고 있다(샤프츠슈나이더 2008). 그도 사회 내 갈등을 중시하지만, 갈등이 초래하는 사회적 균열이 정당체제를 형성하게 된다는 립셋과 록칸과 달리 정당과 정치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회갈등은 동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적 갈등은 억압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정당체제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여, 정당체제 형성에 있어서 동원의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즉, 립셋과 록칸에게 있어서 정당은 종속변수인 반면 샤프츠슈나이더는 정당을 독립변수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최장집은 서유럽의 경우 립셋 및 록칸의 입장이 더 큰 설명력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균열의 역사가 서유럽과 상이한 타 지역의 경우 샤프츠슈나이더의 설명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장집 2010, 38-39).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지는 않으며, 두 가지 주장 모두를 인정하기로 한다. 특정 균열이 특정 정당과 정당체제를 산출하기도 하지만, 특정 정당이 자당에 유리한 특정 균열을 의도적으로 동원하는 것도 흔하게 발견되는 정치현상이기 때문이다. 두 입장 모두를 활용하면서 이 글에서는 공산체제붕괴와 새로운 체제의 형성이라는 체제변혁기에 정치균열이 어떻게 변화하고 정당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산출되었는지를 논하기로 한다.

다른 하나의 이론적 자원은 악셀 호네프트(Axel Honneth)의 인정투쟁이론이다(Honneth 2011). 호네프트는 헤겔을 계승하여 자이는 타자를 통해서만 주체를 획득

하며 따라서 주체는 상호주관성에 의존하게 되고 상호인정을 통해 ‘우리(We)’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주체로서 마주 선 자아와 타자 사이에 인정과 불인정, 인정과 무시를 둘러싼 투쟁이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유년기에 타자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며 이 때 자기확신을 갖게 되고, 자라면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에 대해 권리의식과 자기존경을 갖게 되며, 사회에서 자신이 공헌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자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3가지 형태의 인정인 사랑, 권리, 연대로 발전하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인정투쟁이 발생하게 되는 바, 관심과 사랑이 아닌 폭행과 무시, 사회에서의 제도적·구조적 권리 침해, 특정 생활방식이나 신념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차별 대우 등이 바로 인정투쟁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호네프는 갈등에 대해 긍정적이는데, 투쟁을 통해 사회갈등을 극복하며 정신적으로 더욱 고양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지극히 헤겔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을 긍정하는 이론으로서 호네프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사회는 상호주관적 인정이 가능한 사회이며, 오늘날 그의 인정투쟁 개념을 수용 발전시키려는 시도들이 많이 발견된다.

인정 개념의 세분화 현상도 이러한 시도들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의 대가인 알렉산더 웬트(Alexander Wendt)는 국가들 사이의 인정투쟁이 불가피하게 세계국가를 요청한다는 특이한 주장을 펴고 있다(Wendt 2003). 웬트는 국가 간 인정을 ‘얇은(thin) 인정’과 ‘두터운(thick) 인정’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는데, 웬트가 말하는 얇은 인정은 단순히 법공동체 내에서 독자적인 하나의 주체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두터운 인정은 이에서 더 나아가 그 주체를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여, 두터운 인정은 무한 추구를 가능하게 만든다(Wendt 2003, 511). 웬트의 이 구분도 호네프의 인정 개념을 세분화시킨 사례에 해당된다. 호네프의 인정의 영역을 존재의 영역, 권리의 영역, 가치의 영역으로 나누어 인정 개념을 세분화시킨 오승희의 연구도 인정 개념을 세분화시키려는 시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오승희 2017).

그러나 김학노는 이들보다 인정 개념을 훨씬 독창적으로 수용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호네트의 인정투쟁이나 인정정치를 ‘적대와 인정의 정치’로 발전시키고 있는 바, 정치를 헤게모니투쟁으로 정의하는 자신의 정치이론의 연장선에서 홀로주체적 헤게모니투쟁과 서로주체적 헤게모니투쟁을 논하고 있다(김학노 2010). 그는 이러한 구분을 통일문제에 적용하면서 기존의 ‘통일-분단’ 분석틀 대신 ‘분리-통합’ 분석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분리-통합 분석틀이 분단과 통일문제를 단절론이 아닌 연속론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유용하며, 일반론적 시각에서 다양한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장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김학노 2014, 355-359). 그에 의하면 분리-통합의 정치는 서로주체적 분리와 홀로주체적 분리, 서로주체적 통합과 홀로주체적 통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서로주체적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존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호네트의 인정 개념에 상응하며, 홀로주체적 관계는 호네트의 불인정 내지 무시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김학노는 호네트의 인정 개념을 타자와 주체성의 인식 및 대응 태도와 연결하여 서로주체적 인정과 불인정, 홀로주체적 인정과 불인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사실 김학노의 분류는 웬트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 개념 세분화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웬트도 비대칭적 인정(asymmetric recognition)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김학노의 적대의 정치에 해당될 정도로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는 않다. 웬트의 주장처럼 인정이 얇은 인정과 두터운 인정으로 나눌 수 있다면, 불인정도 얇은 불인정과 두터운 불인정의 분류가 가능할 것이며, 김학노의 개념은 얇은 불인정과 두터운 불인정까지 포함하여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적극인정과 소극인정, 적극불인정과 소극불인정의 분류를 다룰 수 있게 해준다.

김학노의 인정의 정치는 서로주체적 헤게모니투쟁으로서 정치세력 간 관계에 적용할 때 적극인정은 연대로, 소극인정은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적대의 정치는 홀로주체적 헤게모니투쟁으로서 정치세력 간 관계에서 적극불인정은 병합으로 소극불인정은 배제로 나타날 수 있다. 김학노의 적대와 인정의 정치를 도표화하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될 수 있다.

〈표 1〉 적대와 인정의 정치

상호 인식과 태도 \ 관계의 정도	적극적	소극적
홀로주체적	(A) 병합 (or 타도)	(B) 배제
서로주체적	(C) 연대	(D) 경쟁

위의 표에서 (A) 병합은 한 정치세력의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적대적 내지 홀로주체적 흡수를 의미한다면, (B) 배제는 적대적 내지 홀로주체적 대결을 의미한다. (C) 연대는 서로주체적 존중과 공존 및 협력을 의미함으로써 합의민주주의적 측면을 보여준다면, (D) 경쟁은 선의의 라이벌처럼 서로주체적 경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 배제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불인정이라면, (A) 병합은 타자나 상대방의 존재 및 권리나 가치에 대한 침해이자 무시라는 점에서 훨씬 적극적인 불인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 이 구분은 시민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구분에서도 타당하다. 전체주의가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박멸 내지 근절시키고자 한다면(병합 내지 타도), 권위주의는 시민사회에 대해 경계하거나 담을 쌓아 국가에 대한 관여를 차단하는(배제) 소극적 대응을 보인다.³⁾

III. 공산체제와 정치균열

공산체제에서도 정치균열이 존재했는가? 적어도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는

-
- 2)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 불인정이 반드시 병합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경멸 및 참여를 차단하는 배제에서 나아가 궁극적인 제거(elimination)와 타도(annihilation)를 도모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해방공간에서 좌우 세력은 서로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해 경쟁하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정치무대에서 제거할 대상으로 간주하였고, 이승만 권위주의 시절에는 반공법을 통해 정적인 조봉암과 그가 속한 진보당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이 도표에서 (A) 병합은 타도나 제거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3) 이와 관련해서는 자크 루프닉의 ‘전체주의적’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Rupnik 1988).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치균열이 존재하기 어려웠다. 정치균열이 제도화된 이익과 가치의 차이에 기반을 둔다고 보면,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이론적으로 정치균열이 존재할 수 없다. 스스로를 노동자들의 나라로 간주하는 소련형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은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무계급사회를 지향하며 자신들의 목표인 공산사회에서는 착취계급의 소멸을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서유럽에서 나타났던 종교의 균열, 농촌 대 도시의 균열, 자본가 대 노동자의 균열, 중심부 대 주변부의 균열 등은 자본주의의 종식과 함께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현실적으로도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정치균열은 존재하기 어려웠다. 일당의 지배만이 용인되는 당-국가(party-state)로서 다원주의적 균열이나 도전을 불허하는 전체주의적 체제였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노조결성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가 부인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서구의 정치균열과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발견되는 유사(類似)정치균열(quasi-political cleavage)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밀로반 질라스(Milovan Djilas)가 말하는 ‘신계급(new class)’이다. 티토와 함께 유고슬라비아 공산혁명을 수행하고 유고슬라비아의 제2인자 지위에까지 올랐으나 나중에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인해 1954년 당에서 제명되기에 이른 질라스는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계급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였다고 고발하였는데, 그가 말한 신계급은 바로 당관료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질라스에 의하면, 이 신계급은 새로운 경제질서로 인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그 첫 출발은 러시아혁명기 볼셰비키당의 직업혁명가였다. 물론 이들의 출신은 프롤레타리아계급으로서 반자본가 집단이지만, 노동자계급의 이름으로 혁명을 수행하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Djilas 1957, 38). 일반 행정관료가 아니라 당관료 또는 정치관료가 바로 질라스가 말하는 신계급의 핵심세력인 바,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관료와 차이가 나며 그 자체 신계급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신계급은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운영하는 공유화 과정에서 권력과 특권을 확보하게 된다. 레닌의 당이론에 따라 공산당의 당원이 되고 직업혁명가가 된다는 것이 혁명 이전에는 희생을 의미했다면, 혁명 이후에

는 새로운 특권계급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질라스의 지적처럼 레닌은 깨닫지 못했지만 ‘신계급’의 조직화를 시작한 것은 바로 레닌 자신이었던 것이다(Djilas 1957, 47-48). 이들 당관료는 새로운 엘리트 내지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 나중에 공산체제 붕괴 과정에서 노멘클라투라 자본주의(Nomenklatura Capitalism)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이익집단 논의이다. 이것은 소련의 정치에서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익집단과 유사한 집단이 존재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가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련 정치에서 당관료, 비밀경찰, 군부, 산업체관리자들, 경제분야 종사자들, 작가들, 법률가들 등의 집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⁴⁾ 소련정치에서 이들 집단은 각 집단 나름의 응집력과 분화를 보여주면서 각기 상이한 성격과 행동양식을 노정한다. 또한 공적 이익과 가치를 대변하면서도 자기 집단의 좁은 이익을 추구한다. 따라서 일정 부분 서구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이익집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 적용된 이익집단 모델도 세력화 내지 집단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한 자기가 속한 집단 구성원에 의해 선출되거나 그 집단 구성원의 희망사항에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들의 충성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당과 국가이며, 이익집단 접근법에 대한 회의 주의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접근법은 소련 사회에서 당이 수행하는 압도적인 역할은 최소화하고 각 집단이 수행하는 역할은 과장하는 오류를 범한 점이 없지 않다(Skilling and Griffiths 1971, 409). 바로 이런 이유로 이익집단 모델로 소련형 사회주의체제를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익집단 모델은 다원사회가 그 대상인 것이다.

셋째는 당내 노선대립 내지 노선투쟁이다. 레닌의 러시아혁명 성공 직후 신경제정책의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나 스탈린 사망 이후 중공업 우선정책 대 경공업 우선정책의 대립, 그리고 중국의 문화대혁명기 문혁파 대 주자파의 대립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4) 소련정치에 대한 이익집단 접근법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Skilling and Griffiths(1971)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하여 이 세 가지 종류의 현상을 정치균열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우선, 이들 현상이 정치균열로 보기에는 범위나 규모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잠재되거나 잠복된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세 가지 현상 모두 사회적 지지 기반이 미약하고 대중동원과 무관하며 엘리트 위주라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이들 현상이 정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치균열이란 이익의 충돌이나 관념의 대립에 그치지 않고 이 갈등을 낳은 집단이 결국 정치세력화하거나 정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질라스의 신계급론도 정치세력화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이익집단 접근법도 이들 집단이 당과 별개의 조직으로까지 발전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노선대립도 당내투쟁의 성격에 불과하며 새로운 정당으로의 발전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소련형 공산체제에서 정치균열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유사정치균열이 잠재되어 있거나 잠복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일당독재와 공포정치로 인해 저항의 억압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 저항세력의 조직화가 불가능했다. 한마디로 자크 루프닉(Jacques Rupnik)이 지적한 것처럼 소련형 사회주의체제는 시민사회가 부재한 ‘전체주의적’ 사회였던 것이다(Rupnik 1988, 272). 오늘날 북한에서 정치균열을 논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북한에서도 유사정치균열의 측면이 존재한다. 공식적으로는 노동자 농민의 천국인 북한에서도 이밥과 고깃국을 먹지 못하는 인민대중과 출신성분을 기반으로 하여 지배계급으로 군림하는 당관료가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밀로반 질라스의 신계급론이 북한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당관료도 고통을 받았다고 하지만, 특권층으로서의 평양시민이 경험한 고난의 행군과 식량난으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인민들이 겪은 고난의 행군은 분명 다른 모습을 보여 준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도 유사정치균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이는 잠복된 상태에 불과하며 조직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구소련의 반체제 지식인으로서 수용소생활을 경험한 바 있고 이후 서방으로

와서 이스라엘 정치가로 활동하는 나탄 샤란스키는 독재체제 하 국민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체제지지세력, 체제저항세력, ‘이중적 사고(double think)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다(샤란스키 2005, 77). 그가 말하는 ‘이중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란 공산체제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불만을 갖고 있고 공식규범이 허용하지 않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공산체제가 약화될 경우 붓물처럼 저항세력으로 전환한다고 하며, 1989년 동유럽 사회에서의 변화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샤란스키는 해석하고 있다. 그의 지적을 원용한다면, 공산체제 붕괴가 분명해진 시점에 보통사람들까지 저항세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처럼, 공산체제가 약해지거나 붕괴가 임박해질 때에는 비로소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잠복해 있던 유사정치균열이 정치균열의 모습으로 변모하며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공산체제의 약화 내지 해체가 분명해질 때 비로소 이익과 가치에 따라 사람들의 이합집산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정치균열이 다시 출현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시민사회의 재생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반체제세력이 시민사회 재생을 주도하게 되며, 당-국가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당-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원탁회의(Roundtable)가 열리게 된 것이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헝가리의 민주포럼(MDF), 체코슬로바키아의 시민포럼(Civic Forum) 등이 바로 재생된 시민사회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이들 조직들은 공산체제 붕괴 과정에서 대체로 운동정당(movement parties)으로 전환하게 된다.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유사정치균열을 앞의 <표 1>에 대입해 보면, 조직화된 정치세력들 사이의 연대나 경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른 조직이나 정치단위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당 일당만이 지배하는 체제로서, 인정의 정치가 전개될 여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분쇄는 병합 내지 타도에 해당되는 (A)에 속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인정의 정치가 아니라 적대의 정치 일변도였던 것이다.

IV. 체제변혁기 갈등구조의 변화

동유럽에서의 공산체제 붕괴와 체제변혁은 시민사회의 재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당-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억압과 분쇄가 공산체제의 특징이었다면, 당-국가에 대한 조직화된 저항의 출현은 시민사회의 재생과 활성화를 의미한다.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과 함께 헝가리에서도 집권 헝가리사회노동자당(MSzMP)은 당내에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되고, 당내 분열과 병행하여 반체제 민주세력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당의 대중정당성의 위기와 함께 헝가리에서는 1980년대부터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재활성화가 감지되기 시작한다.⁵⁾ 시민사회 재활성화는 헝가리에서 ‘제2사회(second society)’의 존재로 설명될 수 있다. 제2사회란 지배적인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공식적인 제1사회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Hankiss 1990, 82-111), 한키시에 따르면 제2사회의 구성 요소로는, 중앙의 계획과 통제를 벗어나 시장경제 속성을 갖는 제2경제; 공식보도 매체가 침묵하는 뉴스가 유통되고, 소문과 가십이 교환되는 커뮤니케이션망인 제2공공영역; 지배문화에 대조되는 대항문화 또는 대안문화로서의 제2문화; 지배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대중의 의식 또는 세계관을 나타내는 제2사회의식; 스포츠클럽, 협회 등 제2사회활동영역(second sphere of social-political interactions)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제2사회는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사회 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헝가리에서는 폴란드에서의 자유노조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동구국가들에 비해 1968년부터 도입된 경제개혁의 결과 제2사회 요소가 어느 정도 존재했던 것이다.

당-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변화가 바로 체제변혁기 동유럽의 갈등구조의 변화

5) 동유럽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면모는 1980-1981년 폴란드의 자유노조(Solidarity)에서 찾을 수 있다. 1989년 혁명전 시민사회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 혁명과정에서 레짐과 사회와의 타협 및 협상을 거친 반면, 시민사회 요소를 찾기 어려운 다른 동구국가들에서는 혁명과정에서 점진적 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급격한 정권붕괴로 이루어졌다. 폴란드의 경우 조직화된 구심점의 존재가 레짐에 대응하는 사회의 응집을 보여준 반면, 헝가리의 경우 뚜렷한 구심점은 부각되지 않았으나 제2경제의 활성화는 시민사회 성장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폴란드의 Solidarity와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Ash(1983); Frentzel-Zagorska(1990); Z. A. Pelczynski(1988) 참조.

를 잘 보여준다.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상징되는 동유럽 사회주의정권들의 붕괴와 함께 동유럽 각국에서는 많은 수의 정당들이 출현하였다.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이들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분류되는데, 공산체제에 저항한 반체제세력을 중심으로 한 운동정당(movement parties), 대체로 공산당의 온건파들로 재구성되지만 공산당을 계승한 후신정당(successor parties), 그리고 동유럽 공산화 이전 시기의 정당들이 다시 부활한 역사정당(historical parties)이 그것이다. 이들 정당은 지지기반을 다지고 강화하고자 하며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고자 시도하기 마련인바, 이 과정에서 정치균열을 이용하고 동원하며 동시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대체로 역사정당들은 공산화 이전 헝가리의 과거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민족주의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운동정당들은 소련형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대해 대단히 적극적이면서 서유럽 지향적인 색채가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후신정당들은 공산체제의 정당성 상실을 인정하지만 공산체제로부터의 급진적 단절보다는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였다. 헝가리에서는 민주주의 및 민족주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포럼(MDF)과 반체제 민주세력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연합(SzDSz), 그리고 반체제 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청년민주연합(FIDESZ)은 운동정당으로 볼 수 있으며, 독립소지주당(FKGP)과 기독교민주당(KDNP)은 역사정당으로, 헝가리사회당(MSzP)은 후신정당으로 볼 수 있다.

동유럽의 체제변혁은 대체로 소련형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일당독재가 아닌 다당제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 경제적 측면에서 계획경제가 아닌 자본주의로의 이행, 문화와 의식의 측면에서 서유럽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이전 시기의 유사정치균열 대신 새로운 정치균열이 출현하게 되는 바, 헝가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정치균열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치균열이 발견된다.

첫째, 이념과 관련한 균열이다. 공산체제의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 이념의 청산과 관련한 균열이 등장하며, 구체제청산과 관련한 급진적 접근 대 온건한 접근이 대립하게 된다. 대체로 자유민주연합과 청년민주연합은 리버럴 지향으로서 공산체제와의 단절을 강조하였고, 독립소지주당이나 기독교민주당과 같은 역사정당

들은 공산화 이전의 과거를 지향하면서 역시 공산체제와의 단절을 지향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민주포럼으로서, 반체제 지식인 위주인 운동정당이면서도 민족주의와 민중주의를 대변하였다. 이들에 비해 공산당의 후신정당들은 공산체제로부터의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였다.

헝가리의 1989년 ‘협상혁명’은 어떤 의미에서 1988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8년 5월 임시전당대회에서 32년간 헝가리를 통치해 온 카다르(Janos Kadar)가 축출되고 고르바초프맨으로 알려진 그로쓰(Karoly Grosz)가 서기장으로 서 그를 대체하였다. 아울러 포즈가이(Imre Pozsgay), 니에르시(Rezso Nyers), 네이메트(Miklos Nemeth) 등 개혁파들이 새로이 정치국원으로 총원되었다.⁶⁾ 그러나 카다르를 대체한 그로쓰도 개혁파 요구 수용을 주저함으로써 그를 중심으로 한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간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었는데, 점차 개혁파가 우세해짐에 따라 민주진영과의 타협 여지가 커졌다.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의 입장차이가 단적으로 표출된 것은 1956년혁명의 재해석 문제였다. 개혁파는 그때까지 ‘반혁명’으로 단죄되어 왔던 1956년 사건을 새롭게 ‘민중봉기’로 정의내리고 카다르식 과거와의 단절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1989년 2월 헝가리사회노동자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다당제 도입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보수파는 계속해서 민주진영과의 타협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 때문에 헝가리 민주포럼과 자유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주진영은 대중동원에 호소함으로써 1989년 봄 헝가리 정세는 체제유지세력과 체제개혁세력 사이의 대결정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6월에 민주진영은 1956년혁명으로 희생된 나지(Imre Nagy)수상에 대한 재매장식을 국민 지지 속에 주도함으로써 보수파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이후 당내 개혁파와 민주진영 간에 체제변혁을 위요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일당독재의 포기와 다당제 도입, 그리고 나지 수상과 그 동료들에 대한 재매장은 1956년 혁명의 이상을 부분적으로 실현한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헝가리의 체제변혁이 1956년 혁명의 연장선위에서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1989년 6-9월 동안 진행된 원탁협상에서 개혁파 공산주의자들은 폴란드와 달리 아무런 유보 없는 타협, 즉 동유럽국가 중 최초의

7) 1988년 5월 임시당대회의 의의에 대해서는 Schopflin, Tokes, and Volgyes(1988).

완전자유선거에 동의하였다. 헝가리의 사례가 ‘협상혁명’으로 간주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산체제 붕괴와 함께 출현한 이 같은 이념과 관련한 정치균열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전반적으로 소련형 사회주의체제가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체제변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속도와 정도가 중요한 가운데 헝가리의 정치는 그 가운데서도 변혁과정의 온건하였던 것이다.

둘째, 시장메카니즘 도입과 관련한 균열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동유럽에서는 이른바 급진적 충격요법(shock therapy) 대 점진주의가 대립하는 바, 리버럴 지향 정당들이 비교적 신속한 시장화와 사유화를 원한 반면, 다른 정당들은 대체로 점진적 변화를 선호하였다(Aslund 2007, 37). 다만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헝가리의 경우 자본주의 도입과 관련한 균열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공산체제 붕괴 이전에 헝가리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장경제가 도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56년 헝가리혁명 당시 조국을 배신한 것으로 비판받은 카다르가 조국 배신에 대한 면죄부로 국민들의 경제수준 향상을 목표로 실시한 1968년 경제개혁으로 인해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이미 1970년대에 제2경제의 등장과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초에 제2경제의 합법화가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중반 기업관리의 개혁과 1980년대말 사적 자본소유의 합법화가 도입되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헝가리에서는 아직 사회주의체제가 와해되거나 붕괴하기 이전인 1980년대 말에 이미 노멘클라투라자본주의가 성립된 셈이다(Bartlett 1992, 104). 체제변혁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영기업 사유화도 이미 마지막 공산당체제 수상이던 네이메트 정부에서 시작됨으로써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였다. 헝가리에서도 정치세력 사이에 사유화의 속도와 범위를 두고 갈등이 존재하였으나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서와 같은 정도로 큰 대립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경제발전과 시장화에 대한 균열은 체제변혁기 헝가리에서 덜 두드러진다고 평가되고 있다.⁷⁾ 동독의 경우 사유화에 참여할 서독 자본이 있었기에 타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에서 가장 급진적으로 사유화정책을 전개하였

고, 다음으로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비교적 급진적인 사유화 정책을 채택한 반면, 이미 공산체제 시기 동안에 일정 부분 진행된 재산 관련 개혁정책으로 하여 민주화 이후 헝가리의 신정부는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부터 시장을 만들어 가야했던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유화와 시장경제 도입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기에 점진적인 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Bartlett 1992, 117). 즉, 헝가리에서는 사유화 도입과 관련하여 충격요법이나 점진주의냐의 대립에서 정치균열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셋째, 민족문제와 관련한 균열이다. 헝가리의 경우 주변국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에 상당수의 헝가리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1차세계대전의 전후처리조약 가운데 하나인 트리아농조약(Treaty of Trianon)으로 상실한 영토에 대한 미련이 상당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국 거주 헝가리인들의 권익 신장은 주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정치균열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헝가리의 정당들 가운데 특히 민주포럼과 기독교민주당이 민족문제에서 민족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는 반면, 서유럽 지향의 자유민주연합과 청년민주연합은 민족주의 강조에 있어서 비교적 소극적이었고 민족문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반대하며 서유럽에의 통합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민족주의 지향과 보편주의 지향의 대립으로 인해 1990년의 토대선거에서 제1당과 제2당이 된 민주포럼과 자유민주연합 사이에 공산체제 대체라는 큰 테두리에서는 목표가 일치하였지만, 연정 구성이나 정책연합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포럼은 보다 보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역사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넷째,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균열로서 이는 노멘클라투라 자본계급 대 체제 전환 패배자 사이의 균열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대규모 국영기업체가 대부분 적자기업인 동유럽 상황에서 이들 업체에 종사하는 비숙련노동자의 불만이 중요한 변수였으며, 이 비숙련노동자들의 불만을 동원하려는 노동조합이나

7) Evans and Whitefield(1995), p.1180. 이 연구는 적어도 1994선거를 중심으로 볼 때 경제 문제보다 오히려 주변국에 거주하는 헝가리계에 대한 민족주의적 태도가 더욱 중요한 선거 이슈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헝가리 정치에 있어서 이러한 측면은 나중에 청년민주연합이 점차 민족주의적 요구를 강조하고 우파 내지 극우로 선화하면서 다른 정당을 흡수하고 가장 주요한 정당으로 성장하는 것에서도 발견된다.

정치세력의 존재가 사유화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헝가리에서 사유화부문의 성장이 노동자들을 흡수할 여력이 있었고 또 노동자들을 대변할 좌파 정당이 토대선거에서 약한 지지밖에 얻지 못한 결과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불만이 크게 표출되는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았다(Bartlett 1992, 117). 헝가리에서는 폴란드에 비해 노동자들의 조직화가 비교적 약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저항도 비교적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한 균열이다. 특히 공산체제에서 몰수된 재산과 토지의 반환과 보상이 주요한 이슈였으며, 민주포럼과 연정을 맺은 역사정당들이 특히 이것을 강조하였다. 그 중에서도 과거 공산화 이전의 헝가리에서 중요한 정치세력이었으며 자작농을 대변하는 독립소지주당은 토지반환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에 반해 특히 청년민주연합은 토지반환이나 보상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였는데, 청년민주연합의 주장의 핵심은 공산 시절 불의를 당한 사람들이 농민들만이 아니었으며 공산 시절의 피해자 모두를 구제할 방법은 없다는 점에 있었다.⁸⁾

새롭게 형성된 정치균열을 반영한 1990년의 토대선거(founding elections)에서 6개 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다. 총 386석의 의석 가운데 제1당에는 165석을 획득한 민주포럼(MDF)이, 제2당에는 91석의 자유민주연합(SzDSz)이, 제3당에는 역사정당을 대표하며 44석을 획득한 독립소지주당(FKGP)이, 제4당에는 구 공산당의 개혁파를 중심으로 당명을 헝가리사회노동자당(MSzMP)에서 변경하여 33석을 확보한 헝가리사회당(MSzP)이, 그리고 기독교민주당(KDNP)과 청년민주연합(FIDESZ)이 동틀인 21석을 획득하였다. 이 가운데 민주포럼을 중심으로 독립소지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이 참여하여 연정을 구성하였으며, 민주화 이후 초대 수상에 전직 교사이자 연구원이었던 안탈(Jozsef Antall)이 선출되었다.

이미 지적인 것처럼 공산체제 붕괴 및 체제변혁 과정의 초기에 헝가리는 동유럽의 다른 체제전환 국가인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에 비해 정치균열이 그다지

8) 민주화 이후 헝가리에서의 과거청산 문제와 관련한 시도와 실패에 대해서는 김대순 (2015) 참조. 헝가리의 과거청산은 동독과 체코에서의 과거청산에 비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드러지지 않았다. 퀴르세니(Andras Korosenyi)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의회구성의 안정성으로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신의회 구성 이후 첫 2년 동안 의회진출 정당들의 분열과 탈당 및 분당이 특징적이었음에 비해 헝가리의 경우 6개 원내정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원들의 소속 정당 이탈도 소규모에 국한되었다는 것이다(Korosenyi 1993, 89). 다른 하나는 당내 단결(unity)의 유지로서, 헝가리의 경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당 노선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비율이 1990년에는 90%에 가까웠고, 1991년에는 이 비율이 더 상승함으로써 원내 그룹의 응집력(cohesion)을 보여 주었다고 해석한다. 이 응집력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당 기율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Korosenyi 1993, 90). 그리고 이 같은 의회구성의 안정성과 높은 기율이 동유럽의 타국들에 비해 헝가리 정당체제의 안정성을 보여주었다고 보고 있다. 퀴르세니는 헝가리 정치체제에서 정치균열이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를 정치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에서 찾고 있다. 즉, 헝가리의 체제변혁이 급변사태나 유혈혁명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반공산세력이나 반체제세력이 분열되고 경쟁하게 될 여지가 컸다고 보는 것이다.

퀴르세니의 주장처럼 점진적 변혁 과정이 정치균열의 온건한 부각의 사유로 평가될 수 있지만, 이 요소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보다는 해체하고 붕괴시켜야 할 구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강력하지 않았던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1989년 동유럽 혁명에서 헝가리의 경우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의 성격 자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달랐던 것이 더 주요한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⁹⁾ 카다르시기를 상징하는 용어인 카다리즘(Kadarism), 굴라시 코뮌니즘(goulash communism), 1968년 신경제메카니즘(New Economic Mechanism) 등은 체제변혁의 점진적 변화, 온건파 공산주의자들과 반체제 지식인들의 원탁협상, 비교적 완만하면서도 성공적인 자본

9) 헝가리의 사유화 관련 개혁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순탄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민주화 이후 신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이미 구 공산체제에서 진행된 경제개혁의 성과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있는 바틀렛의 논의도, 헝가리의 앙시앙 레짐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앙시앙 레짐과 상이한 성격을 내포하였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의체제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체제변혁과 함께 헝가리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 내지 해체 이후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국가들에서 민주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두 번의 정권교체 테스트(two-turnover test)’를 제시하고 있다(Huntington 1991, 266-267). 이 기준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비판받을 여지가 없진 않지만, 공고화를 측정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는 있다. 이 정권교체는 실질적 여야 정권교체를 의미하며 여당의 계속 집권은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이행기 국가에 있어서 쉽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테스트이다. 헌팅턴의 이 기준을 헝가리에 적용해 보면 민주포럼을 중심으로 한 중도우파가 승리한 1990년 선거는 토대선거이고, 사회당과 자유민주연합의 중도좌파 연정을 가져온 1994년 선거는 첫 번째 정권교체이며, 1998년 선거에서 다시 야당이 승리하여 우파 정권이 집권한 것은 두 번째 정권교체이다. 즉, 헝가리의 경우 1998년경에 헌팅턴의 ‘두 번의 정권교체 테스트’를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헝가리는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순탄한 정권교체와 다당제의 정착 및 유럽통합 과정에의 참여 등을 놓고 볼 때 헝가리의 체제변혁이 초기에 공고화되었다고 평가받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Agh 2001). 그러나 2010년 이후 헝가리에서 신권위주의가 등장하고 민주주의 후퇴가 지적되는 것을 볼 때 헝가리의 민주주의 공고화가 결코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¹⁰⁾

체제변혁기 헝가리의 정치균열 양상을 앞의 <표 1>에 대입해 보면, 여와 야 사이의 공정한 권력경쟁으로서 (D)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치균열 양상이 극단적이지 않고 온건하였으며, 여야 간 갈등이 존재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대화, 협상, 공존이 중시됨으로써, 소련형 사회주의체제 시기의 병합이나 배제가 아니라 서로주체적 인정의 정치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련형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 헝가리의 체제변혁 과정은 과거의 ‘적대

10) 2010년 이후 헝가리에서는 오르반 빅토르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Janos Kornai(2015), Abby Innes(2015) 참조. 이와 관련하여 민주화 이후 헝가리에서 시민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 및 쇠퇴하였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이은구(2013) 참조.

의 정치'로부터 '인정의 정치'로의 전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나오는 말

이 글에서는 1980년대말 및 1990년대 체제변혁기 동유럽의 정치균열의 변동 양상과 갈등구조의 변화를 헝가리를 사례로 삼아 고찰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일당독재의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정치균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도 시민사회가 분쇄되거나 철저히 억압된 상태에서 정치균열이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 물론 밀로반 질라스가 말하는 신계급, 다원사회에서 논의되는 이익집단과 유사한 현상의 존재, 당내 노선투쟁과 같은 유사정치균열의 요소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현상을 정치균열로 보기는 어렵다.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정치균열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체제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소련형 사회주의체제가 해체 내지 붕괴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즉, 지금까지 억압받거나 분쇄되었던 시민사회가 재생하고 활성화되면서 비로소 정치균열이 작동되기 시작하며, 새롭게 형성되거나 재생된 운동정당, 역사정당, 후신정당들 간의 경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체제변혁기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갈등구조의 변화는 당-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억압과 분쇄로부터 시민사회의 재생 및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재생과 부활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균열은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들어 내게 되는 바, 헝가리에서도 이념에 따른 균열, 시장경제 도입과 관련한 균열, 민족문제와 관련한 균열, 노사 간 균열, 과거청산과 관련한 균열 등의 정치균열이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헝가리의 정치균열은 상대적으로 덜 과격하고 덜 극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는 상이한 헝가리의 양시앙레짐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물론 1989년 동유럽 혁명 이전 시기에 헝가리의 경우도 일당독재와 계획경제라는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와의 유사성을 공유하지만, 헝가리는 1956년의 좌절된 혁명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유화된 양시앙레짐의 성격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즉, 자신의 권력이 갖는 부족한 정당성을 일반 대중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보충하려는

카다르체제는 1960년대말부터 경제개혁을 도입하였고 점차 시장 메카니즘을 확대하였던 바, 이런 과정을 거쳐 헝가리에서는 동유럽의 다른 국가에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2사회의 요소가 성장하였으며, 이것이 체제변혁의 특성과 연결되었다.

이처럼 해체하고 붕괴시켜야 할 구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감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강력하지 않았던 헝가리에서는 비교적 순탄한 협상혁명 과정을 밟을 수 있었고,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정치균열이 극단적이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헝가리의 경우 소련형 사회주의체제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적대정치도 덜 극단적이었으며, 체제변혁 과정에서 가능해진 인정의 정치도 2010년 이후의 후퇴된 민주주의로 인해 변화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비교적 공정한 경쟁의 모습을 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11. “한국에서 정치균열구조의 역사적 기원: 립셋-룩칸 모델의 적용.”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3호, 99-129.
- 김대순. 2017. “헝가리 청년민주연합 및 시민정당의 패권적 정당체제의 형성과 의미.” 『통합유럽연구』 8권 1호, 163-189.
- 김대순. 2015. “체제전환기 동유럽 공산주의의 과거사 정리 문제.” 『서양사학연구』 35권, 163-193.
- 김만홍. 1991. 『한국의 정치균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김상봉. 2007. 『서로주체성의 이념: 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서울: 도서출판 길.
- 김지영. 2007. “세계화와 체제전환 시기 헝가리 지식인의 의식구조와 역할.” 『국제지역연구』 11권 2호, 145-174.
- 김학노. 2010. “정치, 아와 비아의 해계모니투쟁.” 『정치학회보』 44권 1호, 31-57.
- 김학노. 2011. “‘서로주체적 통합’의 개념.” 『한국과국제정치』 27권 3호, 29-61.
- 김학노. 2014.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남북한 관계에 대한 함의.” 분리통합연구회 편. 『분단-통일에서 분리-통합으로』, 334-366.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 나탄 샤란스키. 2005. 『민주주의를 말한다』. 김원호 옮김. 파주: 북@북스.
- 샤츠슈나이더, E. E. 2008. 『절반의 인민주권』. 현재호·박수형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 악셀 호네트. 2011. 『인정투쟁』. 문성훈·이현재 옮김. 고양: 사월의책.
- 오승희. 2017. “전후 일본의 인정투쟁과 중일국교정상화: 하나의 중국론에 대한 인정론적 접근.” 『한국정치학회보』 51권 1호, 73-98.
- 이은구. 2013. “탈사회주의 이후 헝가리 시민사회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1권 1호, 287-309.
- 이규영·김경미. 2012. “체제전환 이후 동유럽 극우주의의 발흥과 극우정당의 발전에 대한 연구.” 『유럽연구』 30권 1호, 43-71.
- 최장집.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Agh, Artilla. 2001. “Early Consolidation and Performance Crisis: The Majoritarian-Consensus Democracy Debate in Hungary.” *West European Politics* 24, No.3, 89-112.
- Ash, Timothy G. 1983. *The Polish Revolution: Solidarity 1980-1982*. London: Jonathan Cape.

- Aslund, Anders. 2007. *How Capitalism Was Built: The Transformation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Russia, and Central 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lett, David. 1992.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Property Reform and Democracy in Hungary." *East European Politics and Societies* 6, No.1, 79-118.
- Djilas, Milovan. 1957. *The New Class: An Analysis of the Communist System*.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 Elster, Jon. ed. 2006. *Retribution and Reparation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vans, Geoffrey and Stephen Whitefield. 1995. "Social and Ideological Cleavage Formation in Post-Communist Hungary." *Europe-Asia Studies* 47, 1177-1204.
- Frentzel-Zagorska, Janina. 1990. "Civil Society in Poland and Hungary." *Soviet Studies* 42, No.4, 759-777.
- Hankiss, Elemer. 1990. *East European Alternative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Londo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Innes, Abby. 2015. "Hungary's Illiberal Democracy." *Current History*, Vol.114, Issue 770, 95-100.
- Kornai, Janos. 2015. "Hungary's U-Turn: Retreating from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26, No.3, 34-48.
- Korosenyi, Andras. 1993. "Stable or Fragile Democracy? Political Cleavages and Party System in Hungary." *Government and Opposition* 28, No.1, 87-104.
- Lendvai, Paul. 2012. *Hungary: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tr. by Keith Chest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ndeman, Thomas and Erik Ringmar, eds. 2014.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Recognition*. London: Routledge.
- Lipset, Seymour M. 1970. "Political Cleavages in 'Developed' and 'Emerging' Polities." Erik Allardt and Stein Rokkan, eds. *Mass Politics: Studies in Political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pp.23-44.
- Lipset, Seymour M. and Stein Rokka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Seymour M. Lipset and Stein Rokkan, eds.

-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The Free Press. pp.1-64.
- Pelczynski, Z. A. 1988. "Solidarity and 'the Rebirth of Civil Society'." John Keane,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Verso. pp.361-380.
- Rupnik, Jacques. 1988. "Totalitarianism Revisited." John Keane,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s*. London: Verso. pp.263-289.
- Schopflin, George, Rudolf Tokes, and Ivan Volgyes. 1988. "Leadership Change and Crisis in Hungary" *Problems of Communism* 37, (September-October), 23-46.
- Skilling, H. Gordon and Franklyn Griffiths, eds. 1971. *Interest Groups in Soviet Politic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ndt, Alexander. 2003. "Why a World State is Inevitable."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9, No.4, 491-542.

투고일: 2017.10.12. 심사일: 2017.12.01. 게재확정일: 2017.12.01.
--

Political Cleavage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Eastern Europe during the Era of System Transformation: The Case of Hungary

Jungwon Park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litical cleavages and the changes of conflict structure in Eastern Europe during the era of system transform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Hungary. Two theoretical resources were applied in this research: one is the theory of political cleavage developed by Lipset and Rokkan, and the other is Axel Honeth's theory of struggle for recognition.

Both in theory and practice, there was no room for political cleavage in the Soviet-type socialism. Theoretically, Leninist communism aimed at a classless society where no class struggle existed. Practically, in the Soviet-type socialism one-party dictatorship prevailed and there were neither civil society nor political cleavage. For this reason, politics of antagonism rather than politics of recognition dominated in Eastern Europe during the era of Soviet-type socialism.

Political cleavage began to emerge in Eastern Europe as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ies began to weaken and civil society revives and was revitalized during the late 1980s. As solid control of party-state gradually comes down, the competition of movement parties, historical parties and successor parties was made possible in the political arena. Thus the era of system transformation in Eastern Europe can be summarized as a transition from the suppression and demolition of civil society by the party-state to the rebirth and resistance of civil society to the totalitarian state.

With the rebirth of civil society, political cleavage on the fields of ideology, market economy, nationalism questions, and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operated in Hungary, too. However, compared to other East European countries, political cleavage in Hungary was relatively less extreme and less radical.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 Hungarian communist ancien regime

that was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East European countries. Though Hungary shared with other East European countries the common features of the Soviet-type socialism such as one-party dictatorship and planned economy, in Hungary much softened ancien regime could be maintained until the collapse of communism.

As a result, politics of recognition could make Hungary's system transformation smoother compared to other East European countries.